

### 민주·국힘, 대선 경선 본격화

# 민주, '3인 3색' 정책 경쟁

이재명,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 '3·4·5 성장 전략' 제시

김경수, 5대 첨단 기술분야 육성·혁신성장 3대 전략 등 공약 내걸어

김동연, 지방에 대기업 본사 유치시 법인세 감면 등 '균형 발전' 내세워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3명의 경선 구도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이자 현 정치계의 3인 체제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의 우세 속에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 간 2위 경쟁이 치열하다.

총청권을 시작으로 순회 경선에 나선 세 후보는 '분열은 곧 패배'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난 20대 대선에서 석패한 원인 중의 하나가 이낙연 후보와의 분열이었다고 생각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단합된 모습으로 정책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이름의 싱크 탱크를 출범시키고, '3·4·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잠재 성장률 3%, 세계 4대 수출 강국 진입,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이번 선거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역사적 책임의 완수"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등 타당 후보와의 본선에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정책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이 외에도 AI 산업 100조 투자, 국방 및 안보를 위해 민

간인 국방부장관 임명, 방첩사령부 개편,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내세웠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총청권 행정과학 수도화를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대전을 과학 수도로 조성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청사를 임기 내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와 복지를 위해서는 기본소득 대신 전 생애 기본권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며, 병역제도와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제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향후 5년간 민관이 공동으로 100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 전환을 이끌겠다"며, 경제 전문성과 추진력을 앞세운 전략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50조원 조성으로 AI,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 전환 등 5대 첨단 기술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3대 전략으로 대기업과 벤처 생태계 강화, 초광역 혁신 네트워크 구축, 공정한 경제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긴다는 공약도 발표해 새로운 지방시

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충청 읍성군 출신임을 앞세워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에 대기업 본사와 연구소를 유치할 경우 20년간 법인세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종시에서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고향과 인접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세 후보는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함께 참석해 "안전한 사회 건설은 정권의 핵심 의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등 각 지역에서도 대선 경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인프라 구축, 광역 교통망 확충, 금융 특화 도시 조성 등을 공약화해 중앙당 채택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대선은 탄핵에 따라 60일 이내의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관계로 경선 일정도 단시간에 이루어진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수도권, 강원, 제주 순회 강연을 끝으로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국힘, 혼전 양상... 단일화·제3지대 연대가 핵심 변수로

현재 1차 경선 통과 8명... 27~28일 2차 경선 통해 4명으로 압축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경선 체제에 들어섰다. 지난 16일, 당은 1차 경선을 통과한 본경선 진출자 8명을 발표했고, 이들은 오는 27~28일 열린 2차 경선을 통해 4명으로 압축될 예정이다.

본경선 진출자 8인(가나다순)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훈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당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되고,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4명으로 선출하게 된다.

경선 판도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최근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합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김 연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준표 후보 측은 "단일화도 가능하다"며 열린 입장을 보였고, 반면 한동훈 후보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나경원 후보도 "한대행의 행보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보수 외곽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 이른바 '제3지대' 인물들과의 연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이낙연 전 총

리는 개헌 촉구 행사에서 거취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후보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석민 수석대변인은 전북자치도의 하계 올림픽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 도당에서 준비한 자체 계획 등을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단일화, 제3지대 빅텐트론 연대, 지역 공약 등 다양한 변수가 얽히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보수진영 전체가 어떤 연대를 이룰지는 향후 대선 판도를 좌우할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만호 기자

###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 사진)는 1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오찬숙 의원, 이숙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 등 1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건의안과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영태 의장은 "제95회 춘향제가 풍성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 점검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남원=리포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민주 도당, 사회복지·기독교계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지난 16일, 전북사회복지회관과 도당 인근에서 각각 전북사회복지협의회 및 기독교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간담회에서는 나춘균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해 사회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미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이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력 충원, 특히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내 안전관리자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복지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자부담 증가 문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및 아동청소년 그룹홈, 노숙인시설, 가족센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을 제기했다. 또한, 푸드뱅크 물류센터 설치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열린 기독교계 간담회에는 김동하 목사, 조규선 목사(전북기독교총



연합 회장), 송시용 목사(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상규 목사(전주시 장로교회연합회 회장), 나춘균 장로(전북자원봉사자협회 회장), 장순식 장로(전주공공 동창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주 지역에 기독교 타운 조성하고 순례길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관광 활성화와 연결 짓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연간 예산 3억원 이상 종교 단체에 의무화된 기부금 전자영수증 발행 제도에 대해 10년 유예와 대선 공약화 등을 요청했다. 도당은 지난 9일, 11일, 14일에 이어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도, '미래형 수산업' 육성 본격화

총 857억원 투입... 수산자원 회복·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도는 올해 수산 분야 8개 중점 사업에 총 857억원을 투입해 수산자원 회복과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장은 이날 도청 기자회견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과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올해 수산분야 8개 분야에 총 857억원을 투자하여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산업 육성 계획은 '바다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 '친환경 스마트 기반 양식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및 소비 활성화', '수산업 공익가치 증진 및 복리향상',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 도모', '전북형 양식산업 육성', '지역 특화품종 생산·방류' 등 8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도는 먼저 연안 해역에 인공어초와 해초림을 조성하고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을 확보하는 데 103억원을 들인다. 또, 건강한 수산종자 625만 마리를 방류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연안어선을 감축해 어장 회복력을 높인다.

양식산업도 스마트 기반으로 전환된다. 도는 99억 원을 투자해 자동화 시설과 수질 모니터링 장비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개체급 양식 시범사업과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김 육상양식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50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수산식품 산업도 고도화된다. 새만금 2공구에는 수출가공단지가 들어서고, 소규모 가공업체 지원을 통해 유통체계도 정비된다. '해가람'



전북특별자치도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장이 17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브랜드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 확대도 추진된다. 관련 예산은 총 122억 원이다.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어업인 복지 향상에는 198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어업인 전체로 확대하고, 수산정책보원, 소형어선 안전장비,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활력 도모를 위해 267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연계를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형 양식산업 육성에도 64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토하 양식을 중심으로 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한디리새우 대량 양식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양식장 모델 개발과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구축에 나선다.

지역 특화 품종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도는 7억 원을 들여 9개 품종 총 71만 5천마리를 무상 방류하고, 9개 연구과제를 수

행해 신품종 개발 및 고부가가치 품종 확대에 나선다. 특히 육상 김 양식기술은 특허 등록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양식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11억 원이 투입되며, 수산물별 질병관리, 안전성 조사 확대, 어업 기자재 무상수리, 복합공간 조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공급망을 마련한다. 올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전년 대비 270건 늘어난 870건으로 확대되며, 조사항목도 20개가 증가한 196항목으로 늘어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수산·양식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T/FIP를 운영 중이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구축 포럼'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미정 국장은 "전북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환경과 기술, 어업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전북 국회의원, '공공의대법 통과' 힘 모아

"치료받을 권리 보장 시급... 도민 염원에 응답해야"

전북 국회의원들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희승 의원은 전북도의회·남원시의회, 국회 복지위에 이어 마지막으로 전북국회의원들과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기자회견에는 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상운·이원택·정동영·한병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해 지방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면, 과연 우리의 의료체계는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이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 되어야 한다.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호 기자

### 김정기 전북자치도의원 전북-제주간 교류 물꼬 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산)이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사업 추진 협의를 위해 지난 15일 제주도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전북과 제주 양 도는 전라유학진흥원 준공을 앞둔 11월 초에 제주돌담 조성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청은 현무암의도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제주돌담 조성을 계기로 양 도간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800년 전의 역사적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제주돌담 조성사업을 계기로 해서 두 특별 지자체 간 교류 영역을 확대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에 제주도 측은 11월 초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기념식에 제주도지사와 도의장이 참석하여 양 도간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와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정기 의원은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 방안 협의를 2023년부터 시작했는데 드디어 2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제주돌담 조성이라는 상징적인 교류사업이 양 도간의 교류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